

추미애 아들 측 “병가, 근거 있다”...진단서·소견서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에서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하면서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반박했다.

근거 서류에 기초한 병가와 연장 신청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서씨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상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입장 발표 이후 차분하게 수사를 기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았다”고 밝혔다.

서씨 측은 “병가 근거자료였던 진단서 등의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2015년 4월7일자 경과기록, 2017년 4월5일자 소견서, 2017년 6월21일자 진단서 등으로 각각 적힌 문서를 공개했다.

먼저 서씨 측은 2015년 4월7일자 경과기록과 관련해 “입대 전 이미 양쪽 무릎 통증이 심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2017년 4월5일자 소견서에 대해서는 “입대 후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삼성서울병원 진료를 받게 됐다”며 “진찰 결과 주치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2015년 수술기록
“우측 무릎도 통증...소견서 받아 군병원 진단”
2017년 4월5일 소견서...수술 필요 의견 담겨
“병가 중 수술...통증 여전해 병가 연장 신청”

의로부터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병원 진단이 필요했고, 이 진단 신청을 위해 소견서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서씨 측이 공개한 이 소견서에는 ‘양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양측 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 병명으로 향후 우측 슬개관절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치료의견이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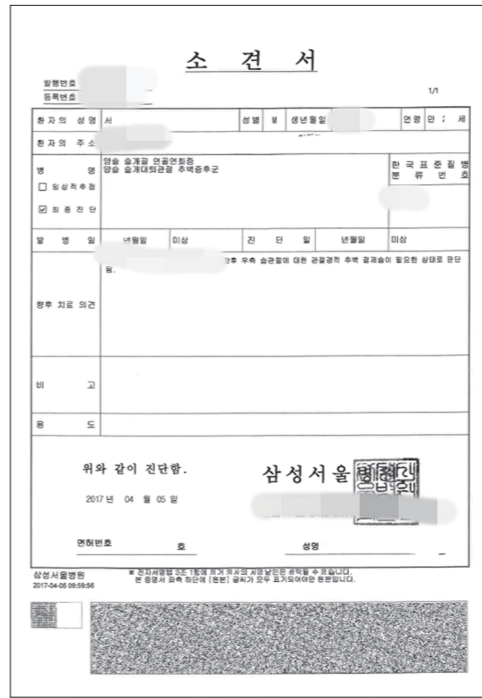
서씨 측은 “이 소견서를 지참해 부대 지원반장에 군병원 진단을 신청했고, 지원반장과 동행해 2017년 4월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의

래진료를 받았다”며 “국군양주병원 진단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언급했다.

이후 서씨는 2017년 6월5~14일 휴가를 나왔고 6월8일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은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면서 2017년 6월21일자 진단서를 제시했다.

해당 문서는 의료기관 명칭을 삼성서울병원으로 하는 진단서 이름의 서류다.



내용에는 ‘우측 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 병명으로 2017년 6월8일 수술을 받았다는 내

용과 “향후 약 3개월간 안정치료를 요한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

서씨 측은 지난 2일에도 입장을 내 “병가 기간 무료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무료인 2017년 6월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는 등 주장을 하면서 휴가 미복귀 등의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씨가 2017년 6월5일~27일 이례적으로 장기 휴가를 다녀왔으나 23일 휴가 중 병가 19일은 근거가 없다는 등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추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이 있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의혹과 관련해 현재 야당 측에서는 추 장관 보좌관이 병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했다.

유유나기자



태풍 '하이선' 복상에 일부 열차 운행중지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6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 대합실 전광판에 동대구역-동해 구간 무궁화호 운행중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서울집회 참석자 등 7명 구상권 검토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7명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 보건당국은 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8·15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한 7명에 대해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변호사가 구상권이 맞는지 손해배상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청구할 계획이다”고 이야기했다.

보건당국은 최근 전남 나주 중흥골드스파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휴대전화 GPS 추적에 거짓이 들른 1명을 고발했다. 또 서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동선 등을 제대로 답변을 하지않은 6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모집·인쇄책’ 역할을 한 목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서비스 탑승자 명단과 휴대전화 GPS 위치추적 결과, 제보 등을 토대로 228명이 집회를 다녀온 것으로 추정했다.

신봉우기자

미화원 채용에 돈이 오가?...‘시의원 vs 나주시’ 날선 공방

지차남 시의원 “돈 오가고 면접 점수 조작” 의혹 제기

남 나주시가 진행한 환경미화원 채용 결과를 놓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다양한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시의원과 집행부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5일 나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차남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돈이 오가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5분 발언 말미에서 지 의원은 “경찰청 주변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응시자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응시자 2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금품 수수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고 폭탄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지 의원의 공개 의혹 제기 건은 지난 4일 나주시의회 인터넷 중계망을 통해 생중계된 이후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대화방으로 번져 감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나주시도 이날 오후에 반박 입장문을 통해 “소위 카더라 통신에 의존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시와 시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지 의원이 제기

한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면접특권이 없는 시의원의 회기 중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진행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은 지난 4월 공개채용 공고로 시작으로 6월에 완료됐다.

좁은 취업문을 반영 하듯 10명 선발에 113명이 응시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배점은 총 100점 면접 기준에 1차 서류심사(10점), 2차 체력장(45점) 시험을 거쳐 우선 27명을 선발하고 3차 면접(45점)을 진행했다. 합격자는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해 6월에 발표했다.

하지만 한 제보자가 최종 합격자 문서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미확인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지 의원이 이러한 소문과 일부 탈락자들의 제보를 근거로 집행부를 향해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면접관을 포함한 선발 과정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 요구라 해도 면접관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해당해 제출할 수 없고, 관련 규정상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공개 불가 원칙을 들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 의원이 주장한 ‘평가 배점을 부당하게 배분했다’, ‘면접방식의 오류’, ‘스스로 정한 면접평가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점수조작’ 의혹 제기 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쟁점이 된 ‘면접방식의 오류’ 주장에 대해 나주시는 “평가의 기준 없이 면접관이 임의로 45점의 점수를 배점하는 것이 아니다”며 “평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나주시는 면접 기준의 경우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면접관들이 이에 근거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스로 정한 면접평가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에 대해서 “면접관이 면접항목과 무관한 질문과 1개 문항만 질문한 사실이 없고, 면접관 별로 의무적으로 정해진 질문 개수도 없다”고 의혹 제기여 선을 그었다.

특히 ‘점수조작’에 대한 강력한 의혹을 제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응시자의 일방적인 제보에 의존해 마치 점수를 조작한 것처럼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동취재본부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